

2005년부터 도입된 장려금은 지급인원과 지급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09년 지급인원은 1,956명으로 전년 대비 71%가 증가하였다.

장려금 지급현황

(단위 : 만원, 명)

연도	종류	직업훈련	자격취득	우선선정 직종	취업	총액
2010.6	지급액	64,020	69,600	29,600	274,330	437,550
	인 원	409	348	148	548	1,453
2009	지급액	88,420	104,000	21,800	296,850	511,070
	인 원	681	520	109	646	1,956
2008	지급액	62,940	69,040	18,800	89,100	239,880
	인 원	500	346	94	201	1,141
2007	지급액	36,000	43,400	9,800	12,150	101,350
	인 원	289	217	49	28	583

가산금은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노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가정 아동보호를 위해 지급되며, 이 중 동일인에게는 하나의 가산금만 지급하고 있다.

가산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구 분	지급기준	지급수준
연령가산금	만 60세 이상	720
장애가산금	장애등급별	1,540(1급), 1,080(2~3급), 360(4~5급)
장기치료가산금	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	1개월×80
한부모가정 아동 보호 가산금	만 13세 이하 한부모 아동	360

2) 주택 지원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이후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알선하고 주거지원금을 지원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역을 결정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며, 이들이 희망하는 지역에 배정하되, 주택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차순위지역으로 배정하고 있다.

3) 취업 지원

정부에서는 사회에 진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실시, 취업 알선, 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하나원은 2008년부터 노동부, 직업훈련기관, 기업체가 협력하여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맞추어 ‘모집-훈련-채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2010년 5월 현재 제과제빵, 귀금속 디자인, 조리사, 양장사 과정에 189명이 참가하여 그중 124명이 협력업체에 취업하였다. 하나원은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과 협력하여 ‘메자닌아이팩’이라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55명의 취업을 지원하였다.

또한 통일부는 2009년 11월 30일 경기도·(사)북방권교류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영농분야 사회적기업 설립에 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사업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정부-지방-민간과 선도적 협력모델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2010년 상반기에는 12개의 북한이탈주민 (예비)사회적기업 설립을 지원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경기도내 10개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 11명을 채용하도록 지원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55개 고용센터에 전문적인 취업상담 공무원이 북



북한이탈주민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서울남부, 2009.7.16)

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진로지도와 직업훈련기관을 알선하는 한편 이들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장을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지방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통일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북한이탈주민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2009년 7월부터 11월에 걸쳐 서울 남부, 경기·인천, 서울 북부, 부산·경남, 광주·전라 등 전국 5곳에서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전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258명이 참가하여 그 가운데 51명이 채용되었다.

2010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청과 통일부(하나원)가 공동으로 ‘북한이탈주민과 중소기업 만남의 장’을 진행하고 있다. 동 행사는 구인이 필요한 국내 중소기업과 구직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면접을 통해 채용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0년 5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430개의 중소기업과 854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하여 509명이 채용에 합의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임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북한이

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년차에는 월 50만원의 범위, 2년차에는 월 70만원의 범위,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연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3년차에도 월 70만원의 범위 내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용지원금의 수혜인원은 2004년까지 소폭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5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고용지원금 지급액이 전년 대비 83%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05년에 도입된 취업장려금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지원금 지급현황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6
업체수(개)	226	274	240	218	323	378	564	888	1,151	1,110
인원(명)	251	296	310	269	446	497	728	1,111	1,489	1,513
지급액 (만원)	99,965	113,025	109,416	94,461	142,628	140,200	224,033	349,457	640,600	426,966

4) 교육 지원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나 제3국에서 이수하였던 학력을 교육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아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이하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시도교육청 산하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전문대학 이상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 보호기간 중이거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하는 경우, 일반대학이나 교육대학은 만 35세 미만에 입학할 경우 학비지원이 가능하며,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타 교육훈련기관은 연령에 관계없이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공립 대학의 경우 학비가 전액 면제되며, 사립대학의 경우 국가가 학비의 50%를 보조하고 있다. 2009년에는 사립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708명에 대해 약 19억원의 학비를 지원하

였으며, 2010년 6월 현재 798명에 대해 약 1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국내입국 인원이 증가하면서 탈북청소년의 숫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총 입국 인원 중 10대 청소년은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남북간 이질화된 문화 및 탈북과정에서의 학업중단 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탈북청소년들의 사회적응 및 일반학교 편입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디딤돌학교 성격의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 6월 현재 173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그 밖에도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탈북청소년보호시설 및 대안학교 10여 개를 지원하고 있다.

5) 사회보장 지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이들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생계급여제도가 있고,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의료혜택을 지원하는 의료급여제도가 있다. 또한 정착지원법 제25조의2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2010년 북한이탈주민 생계급여 지급 기준(최고액)

세대 기준	현금 급여액	세대 기준	현금 급여액
1인 세대	42만원	4인 세대	114만원
2인 세대	72만원	5인 세대	135만원
3인 세대	93만원	6인 세대	156만원

생계급여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온 뒤 6개월까지는 조건부과를 면제하여 시행하지만,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조건부 수급권자로 편입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금을 지



「통일부-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진료지원협약서 체결(2009.11.11)

급한다. 또한 세대구성원이 모두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대구성원의 수보다 1명을 더 추가하여 소득인정액 및 현금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한편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소득인정액 기준은 일반국민에게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의 120%를 적용한다. 또한 2009년 11월 11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진료지원협약서를 체결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입원비, 수술비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연금 특례는 정착지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보호결정 당시 만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북한이탈주민은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60세 이후에 가입기간이 5년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6) 거주지 보호 및 민간을 통한 지원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은 정착도우미, 보호담당관, 북한이탈주

민후원회,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지역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정착도우미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 전입한 초창기에 일상생활과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착도우미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 전입한 이후 1년 동안 지역사회를 안내하고 이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듣고 도와주는 ‘친근한 이웃’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0년 6월 현재 2,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보호담당관은 고용지원센터의 취업보호담당관 외에 거주지보호담당관과 신변보호담당관이 있다. 거주지보호담당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되어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전입과정에서부터 주민등록, 생계급여 지급, 의료급여 대상자 지정 등 사회보장제도의 편입은 물론, 증명서 발급과 같은 각종 행정지원 업무와 거주지 실태조사 등을 담당한다. 2010년 전국 20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신변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지정하는데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을 보호하고 거주지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 6월 현재 8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지역 내 보호담당관과 지역사회 복지관,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 필요한 생활실태자료를 파악하고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10년 6월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26개의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에서도 지역사회 복지관,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심리상담, 청소년교육, 주민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정착지원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정단체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과 우리사회 적응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탈북 청소년 지원사업을 직접사업으로 전환하여 대안교육단체 및 보호시설, 방과후 공부방, 장학사업을 강화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2010년에는 재소자 등 인성프로그램, 주택 미배정자를 위한 쉼터 운영 프로그램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등 총 46개 단체에 46개 사업을 지원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2010년 6월 현재 78명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실제 정착현장인 거주지에서의 정착지원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에서 초기적응 및 취업·진로지도 등 종합적인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역적응센터는 하나원을 수료하고 거주지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3주간의 초기집중교육과 1년간의 밀착된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고 안정된 정착을 지원한다.



서울북부 하나센터 개소(2009.3.27)



북한이탈주민 사랑나눔콘서트(2009.11.13)

2009년에는 서울, 경기 2개 지역, 대전, 대구, 광역 등 총 6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였다. 2010년에는 전년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1곳 이상씩 총 30곳을 지정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또한 2009년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문제가 거주지 정착 및 취업 등 정착 전반에 있어 파급효과가 큰 만큼, 인식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우선, 통일부 홈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제도와 현황을 소개하는 코너를 신설하였고 2009년 7월 8일 하나원 10주년을 계기로 하나원 내부시설을 공개하는 프레스투어를 실시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사랑나눔콘서트 실시,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 결의대회 개최, 북한이탈주민 사랑운동 협약식 체결, 홍보동영상 제작·방영, UCC 공모전, 성공·미담사례 발굴·배포 등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였다. 2010년 들어 국문·영문판 홍보리플렛을 발간하였고, 취업지원을 위한 홍보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소재 영상시나리오 공모전도 실시 중에 있다.

제2절 통일준비를 위한 대내외적 협력체제의 구축

1. 대북정책 추진 범정부적 협력체제 강화

정부는 대북정책이 국민의 의사와 법령의 제정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유관부처 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제도화하였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범정부적 협의기구이다. 동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9명의 민간위원과 13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인 정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위원으로 민간위원 9명(국회의장 추천 7명, 남북관계발전위원장 추천 2명)을 포함함으로써 공식적인 국민 의견 수렴 기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2008년 12월 김영호(성신여대), 양병기(청주대), 한용섭(국방대), 김근식(경남대), 박명림(연세대), 백학순(세종연구소), 장영수(고려대), 박현선(고려대), 이정희(한국외대) 등 제2기 민간발전위원 9명이 임기 2년(2008.12.27~2010.12.26)로 위촉되었다. 민간위원들은 2009년 1월 22일 위촉식 및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2010년 상반기까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여러차례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였다.

지금까지 1차례의 남북관계발전위원회와 3차례의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009년 3월과 10월, 그리고 2010년 1월의 실무위원회를 통해 기본계획 변경안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 2010년 1월 29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변경안 심의를 완료하였다.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개최를 정례화하여 상시적으로 남북관계 현황을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범정부적 통일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적 통일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범정부적 협의체이다. 동 협의회는 위원장(통일부 장관)을 포함하여 13명의 정부위원과 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9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규정」(대통령령, 1989.3.31 시행)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다음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법률에 근거를 둔 협의체로 발전하였다. 협의회는 1989년 출범 후 2010년 6월 말 현재 총 232회 개최하였으며, 2009년~2010년 6월말까지 총 20회를 개최하여 「북한 신종플루 발생 관련 대북 물자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 등 42개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또한 2008년 5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부칠 안건 등에 대한 부처간 실무적 조정·협의 기능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2009년~2010년 6월말까지 13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97년부터 설립·운영되고 있다. 동 협의회는 통일부 차관(위원장)을 포함하여 19개 정부부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어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며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다. 2009년에는 전체회의 3회, 실무협의회 5회를 개최하여 정착지원제도 개선방안, 취업지원 대책수립 등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들을 협의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업무는 사회적응교육, 취업, 주거, 사회복지, 지역정착

등 정부 업무 전 분야에 걸쳐있는 만큼,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중앙부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지정된 각 지방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등의 민간단체와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들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2. 국제협력과 해외홍보

정부는 국제협력 확대와 해외홍보 강화를 통해 한반도 주요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해외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국내외에서 개최하여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정책개발에 활용하였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주요국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통일부를 방문한 주요 인사로는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g) 미국 국무부 부장관, 캠벨(Kurt Campbell)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보즈워스(Stephen Bosworth)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우다웨이(Wu Dawei) 중국 외교부 부부장, 야치(Yachi Shotaro) 일본 정부대표, 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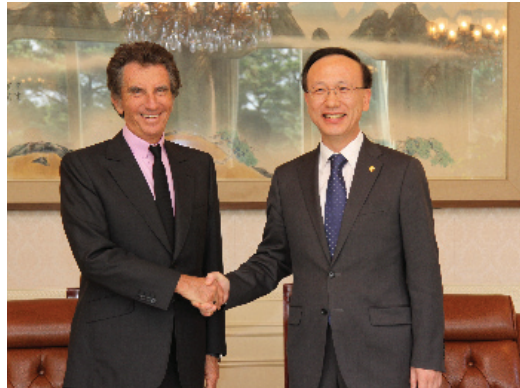
통일부 장관-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 면담



통일부 장관-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면담



통일부 장관-아치 일본 정부대표 면담



통일부 장관-랑 프랑스 대북정책특사 면담

하라(Maehara Seiji) 일본 민주당 중의원, 랑(Jack Lang) 프랑스 대북정책특사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남북관계 상황이 변화할 때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중남미, EU 등 주요국 대사 간담회, 라운드테이블 등을 개최하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와 지지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각 나라 주한 공관의 실무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남북관계 현황 및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한편, 각급 통일부 출장단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지역 등을 방문하여 실무급 정책협의를 갖고 한반도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독일 정부와는 독일통일 20주년을 맞아 구 동독지역 재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연방내무부와 정례적 정책협의를 진행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독일 통일 및 통합 경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통일문제 의원 워크숍」을 통한 의회 차원의 국제 협력활동도 계속하였다. 통일부의 지원하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미국(2009.3), 유럽(2010.3) 등을 방문하여 정부 및 의회 관계자, 전문가 등을 만나 대북

정책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정책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서 현지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통일전략대화」를 개최하여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동 세미나는 미국 몬트레이 국제문제연구소,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일본 게이오대 현대한국연구센터, 일본 히로시마시립대 평화연구소, 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해외 주요 연구기관과의 협력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와 함께 미국 시카고·로스앤젤레스, 중국 베이징·선양·상하이, 일본 홋카이도·후쿠오카·히로시마·도쿄·교토, 러시아 모스크바, 카자흐스탄 알마티 등지를 방문하여 현지 동포사회를 대상으로 대북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미국, 중국, 일본의 경우, 2009년부터 현지 대사관 주재 통일연구관을 활용하여 「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주요국의 대북정책 동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방한 중인 해외 한반도 전문가를 초청하여 통일부 직원과 의견을 나누는 「인터내셔널 포럼」을 격월로 개최하였다. 「인터내셔널 포럼」은 전문가의 발제와 자유 토론을 통해 통일부 직원들에게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동 포럼에는 위트(Joel Witt) 전 미국 국무부 북한담당관, 매닌(Mark Manyin) 미국 의회조사국 연구원, 오키노기(Okonogi Masao) 일본 게이오대 교수, 미야모토(Miyamoto Satoru) 일본 세이가쿠인대 교수, 아레츠(Jurgen Aretz) 독일 튀링겐재건은행 총재, 밥슨(Bradley Babson) 전 세계은행 동아태 자문관 등이 초청되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홍보 활동도 전개하였다. 매주 주요국 정부 및 의회 관계자, 주한 외교관, 해외 한반도 전문가 등에게 영문 뉴스레터를 발송하여 남북관계 상황을 설명하였고, 국내 연구기관에서 발간하는 영문 간행물인 「통일한국」과 「Korea and World Affairs」 등을 구매하여 이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지역 160여 개 국가에 배포하였다. 영어·중국어·일본어 정책홍보 리플렛을 발간하여 주한 공관 및 주요 국가에 배포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현황 및 성과를 홍보하기도 하였다.

3. 한반도 비전포럼

정부는 6.25 60주년, 독일통일 20주년이 되는 2010년을 맞아 국제사회 지도자급 인사 및 전문가를 초청, 한반도의 평화 및 통일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대내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한반도 비전포럼: 한반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를 주제로 국제 회의를 개최하였다.(2010.5.13~14, 서울)

이번 회의는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 한스 올리히 자이트 주한 독일대사, 웬디 셔먼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조정관,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 등 해외 저명 인사들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1박 2일 동안 한반도의 평화 및 통일의 비전에 대한 특별연설과 토론회 등이 진행되었다. 1일차 회의는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 특별연설, 자이트 주한 독일대사 특별연설, 국내외 저명 인사들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로 구성되었으며, 2일차 회의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각계 각층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및 국민참여 토론회로 구성되었다.

「한반도 비전포럼」 세부일정

구분	주요 내용	참가자
5.13(목)	제1회의 :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	토론 : 이홍구 전총리, 공로명 전 외무장관, 웬디셔먼 전 미국 대북정책조정관
	제2회의 : 「독일통일 20주년과 한반도에의 함의」	특별연설 : 자이트 주한 독일대사 사회 : 하영선 서울대 교수 토론 : 남주홍 경기대 교수,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제성호 중앙대 교수
	제3회의 : 「한반도 평화와 안정으로의 길」	특별연설 : 콜린 파월 전 장관 사회 : 현홍주 전 주미대사
	대통령 주치 만찬	해외참가자 및 주요 패널
5.14(금)	기조연설 :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
	제1회의 : 「비핵·평화·민주주의의 한반도」	사회 : 백진현 서울대 교수 발제 : 후나바시 요이치 아사히신문 주필, 안드레이 하진 러시아 연방상원의원,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위엔지엔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토론 : 윌리엄 드래넨 전 미국평화연구소 부소장, 최강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제2회의 : 「한반도의 미래경제비전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 :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발제 :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 크리스토퍼 데이비스 옥스퍼드대 교수, 김병연 서울대 교수, 쉬정강 홍콩대 교수 토론 : 이석 KDI 연구위원
	제3회의 : 「함께 생각하는 녹색한반도」	사회 :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토론 : 강성진 고려대 교수,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강인선 조선일보 기자, 김홍광 NK지식인연대 대표, 권구훈 골드만삭스 상무

이번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대학생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일반 국민(1일 700명)들의 행사 참석 이외에 현장 질문, 현장 설문조사, 행사 관련 공모전 참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들이 통일담론의 주체로서 행사 추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이번 행사는 통일부가 주최하는 첫 번째 대규모 국제 행사로서, 국제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통일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의 단